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492-01

정책보고서 2018-11

# 아동수당 소득재산 조사방법 및 선정기준 연구



최현수·박아연·오미애·진재현·천미경·전지수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책임연구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기초연금 2017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공저)

**【공동연구진】**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아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진재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천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전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와 용역계약(2018.1)한 「아동수당 소득재산  
조사방법 및 선정기준 도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홍 식



# 목 차

제1장 아동수당 선정기준 연구 필요성 및 개요 ..... 1

제2장 아동수당 선정기준 및 자산조사 운영체계 ..... 15

제3장 아동수당 2018년 선정기준 및 수급대상 분포 예측 분석결과 ..... 31

제4장 아동수당 신청 및 수급대상 선정 현황 ..... 53

제5장 아동수당 2019년 선정기준(안) 추정 결과 ..... 59

## <부 록>

부록 1 아동수당 자산조사 간소화 관련 자동판정 적용 모의분석 결과 ..... 65

부록 2 아동수당 선정기준 및 수급대상 분포 예측 비교분석 결과 ..... 75



제 1 장

아동수당 선정기준 연구  
필요성 및 개요



# 1

## 아동수당 선정기준 연구 < 필요성 및 개요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18년 예산안 의결 시,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통과됨에 따라, 2018년 9월 시행 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위 10% 선별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방법 및 선정체계 도출 필요

○ 문재인 정부는 국정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중 첫 번째 국정전략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천하기 위하여 6가지 국정과제(42~47)를 제시하고 있음

-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 (45) 의료 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는 시장경제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고 불평등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평등성의 증진, 인간 존엄

성의 유지, 사회 구성원의 연대성 강화를 통해 국민통합을 추진하고 포용적·적극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국가 체제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인상 및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등 소득지원 강화와 주거부담 완화와 주거복지 향상, 의료 보장성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의료 접근성 제고 및 예방 중심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함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관련하여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2018년 예산안 의결 시,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통과됨

○ 이에, 2018년 9월 아동수당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형평성 있게 상위 10%의 가구를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제외할 수 있는 소득재산 조사방법과 선정기준 적용방안을 도출하여 데이터 중심의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아동수당의 선정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2. 연구내용

○ 본 연구는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된 아동수당 지원대상 선정방식의 특성을 사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하여, 전체 가구 및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 보유 분포 및 소득인정액 분포를 기준으로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재산 분포 가운데 상위 10%의 가구를 제외하

고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아동수당 선정체계 (소득재산 반영여부 및 조사방법 - 소득인정액 적용여부 및 산출 방식 -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인정액 분포를 고려한 선정기준)를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임

- 이를 위해, 우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항목별 공적 행정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연계하고, 이를 기초로 전체 가구를 구성하여 2인 이상 가구와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추정을 위한 분석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이러한 DB 구축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데이터의 한계를 보정할 수 있도록 통계청 각종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및 통계적 추정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소득재산 및 소득인정액 분포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시나리오별 모의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가구 및 가구를 대상으로 구축된 소득재산 공적 행정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공적 행정데이터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행정데이터 또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아동수당 신청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전체 가구와 영유아 가구 소득재산 수준 및 소득인정액 분포를 추정하여 선정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 이러한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방향에 대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다음의 4가지 연구주제를 설

## 정함

- (연구주제 1) 전체 가구 및 아동수당 지원대상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기준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연구주제 2) 분석 DB 기반으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을 활용하여 전체 가구 및 영유아 가구 소득재산 및 소득인정액 분포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적용 가능한 선정기준 도출
- (연구주제 3) 아동수당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적용 항목 도출 및 조사방법 검토 및 제시
- (연구주제 4) 기타 아동수당법 제정 과정에 도출되는 아동수당 지원대상 선정 및 규모 관련 심층 분석 수행

### ○ (연구주제 1) 전체 가구 및 아동수당 지원대상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기준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 국민 대상으로 소득재산 항목별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공적 행정데이터를 사전에 확보하여 연계하고, 이를 기초로 전체 가구를 구성하여 2인 이상 가구와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추정을 위한 분석 DB를 구축함
- 1인 가구를 제외하고 전체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재산 보유 실태 및 소득인정액 분포 가운데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 보육료지원 또는 양육수당

과 달리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인 영유아 가구뿐만 아니라 전체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및 소득인정액 분포 분석 가능한 DB 구축 필요

- 건강보험공단 자료 이외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가구정보를 기반으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의 가구구성 정보를 반영하여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인정액 수준을 보정할 수 있는 수급규모 추정 분석 DB 별도 구축
- 분석 DB 구축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데이터의 한계를 보정할 수 있도록 통계청 각종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및 통계적 추정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
  -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등 기존 행정자료, 통계청이 생산한 마이크로데이터 등 비교 분석을 통한 누락항목 등 보정방안 적용
- 구축된 분석 DB를 기준으로 아동수당 선정기준 도출 및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가구구성 및 가구주 연령대 등을 고려한 가구유형 및 지역구분 등 가구특성별 주요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 분포 분석
  - 이러한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 분포를 통해 영유아 가구에 대한 아동수당 소득재산 조사 및 적용여부,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등 선정기준 도출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여 정책적 판단에 활용함

○ (연구주제 2) 분석 DB를 기반으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을 활용하여 전체 가구 및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인정액 도출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적용 가능한 선정기준 도출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연금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현행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대상 선정체계 비교 검토
  - 기존 복지사업 선정체계 비교 검토를 통해 아동수당 선정체계 구성의 기본방향 설정
- 재산의 반영방식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출 적용방식 또는 소득재산 보유 수준을 각각 별도로 적용하는 Cut-off 방식에 따른 선정체계 구축 및 선정기준 도출방안 비교 검토
  - 소득인정액 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분포를 기준으로 선정
  - Cut-off 방식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별도 적용하여 선정
- 아동수당 선정체계를 구성하는 정책 파라미터 도출 및 선정기준 도출방안 관련 다양한 정책 모의분석 시나리오 구성
  - 재산의 반영방식 이외에도 맞벌이 근로소득공제, 기본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다양한 정책 파라미터 적용방안 및 근거를 바탕으로 대안 마련
  - 정책 모의분석 시나리오에 따른 선정체계 대안별 선정기준 및 아동수당 수급 영유아 규모 비교 분석
- 2018년 9월 적용 아동수당 선정체계 및 선정기준 제시 및 영향 분석

- 소득재산 항목별 반영여부 및 조사방법, 소득인정액 및 Cut-off 방식 적용에 따라서 전국 2인 이상 가구 상위 10%를 제외하는 선정기준 제시
  - 선정기준 대안에 따른 아동수당 제외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 보유 수준 분석
  - 지역별,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보유형태별 영유아 가구의 제외 비율 모의분석
  - 예상 신청률, 해외 체류비율, 연간 출생아 수 감소 등 변동요인 검토
- ‘19년도 아동수당 선정기준 도출
- ‘19년도 아동수당 선정기준 도출을 통한 고시·지침 개정 등 행정절차 지원
  - 아동수당 시행과정에서 입수된 탈락자, 미신청자 행정데이터를 분석, ‘18년도 선정기준 도출방법 평가·보완

○ (연구주제 3) 아동수당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적용 항목 도출 및 조사방법 검토 및 제시

- 아동수당 지원대상 선정체계에 적합한 소득재산 반영여부 및 조사방법 검토
- 소득인정액 또는 소득재산 Cut-off 방식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반영여부 및 조사부담, 영향도 비교 검토
  - 소득재산 유형별 반영여부에 따른 소득재산 자료 업데이트 및 효율적인 조사방안 도출

- 가구의 소득재산 보유 분포 및 유형 분류를 통한 조사 효율화 방안 검토
- 지자체 조사부담 및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재산 조사 항목 및 조사방법 검토

○ (연구주제 4) 기타 아동수당법 제정 과정에 도출되는 아동수당 지원대상 선정 및 규모 관련 이슈별 심층 분석 수행

- 아동수당법 국회 제정과정에서 제기되는 요청 사항으로 구축된 분석 DB를 통해 파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 수행
- 법 제정 과정에 논의되는 아동수당 조사방식 및 다양한 선정체계 변화에 따른 선정기준 및 아동수당 수급 영유아 규모 등 분석
  -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선정체계 대안별 선정기준 및 수급 영유아 규모 등 비교 분석
- 선정체계 대안별 지자체 예상 수급 영유아 규모 및 예산 변동 관련 추가 분석

###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관련 문헌 검토
- 기존 복지사업의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등 복지대상 선정체계 관

## 련 비교 검토

### □ 국내외 현장 방문조사 및 벤치마킹

- 아동수당 선정체계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방법 및 조사부담, 선정 기준 적용방식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 방문조사 실시
- 행정데이터 연계 및 통계적 방법론 활용을 통한 정책설계 및 연구 사례 벤치마킹

### □ 복지대상 선정체계 관련 행정데이터 기반 연구과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융복합 연구 추진

- 복지대상 선정체계 표준화 및 복지사업 선정기준 연구,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 등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융합 연구 추진

### □ 행정데이터 기반 다양한 통계적 추정 방법론을 활용한 실증 분석

- 다양한 행정데이터와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및 영유아 가구 소득재산 및 소득인정액 분포, 아동수당 선정체계 조정에 따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분석

### □ 자문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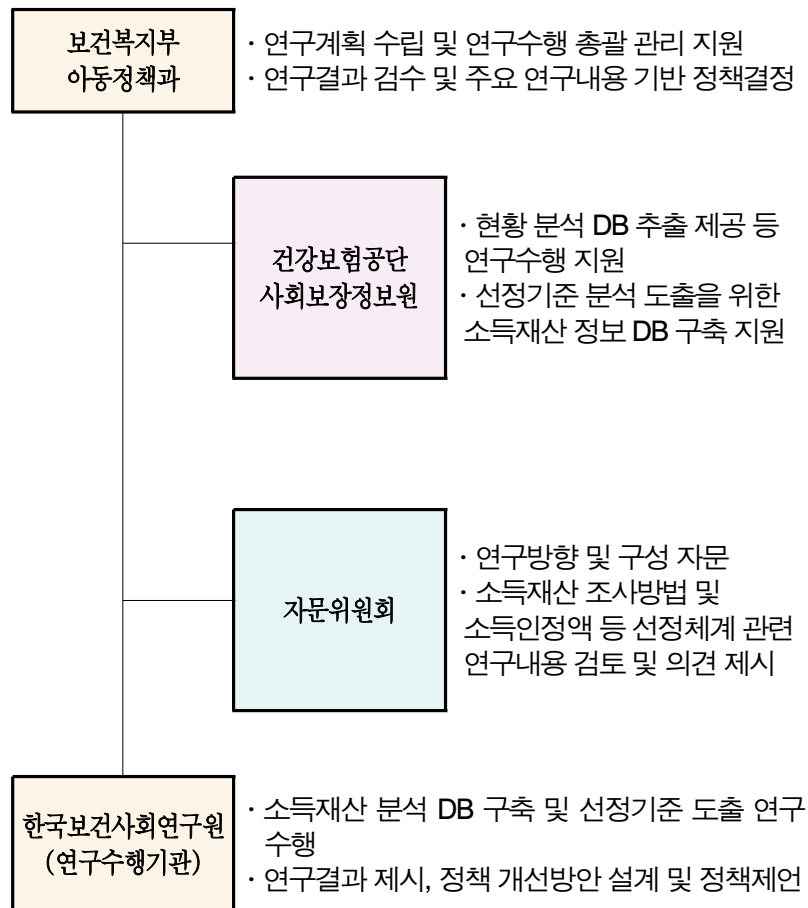
- 공공부조 등 복지대상 선정체계 전문가, 지자체 통합조사 담당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연구내용 자문 및 정책 제언 관련 의견수렴

####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아동수당 선정체계 구축을 위해 수행되는 본 연구를 통해, 행정비용과 조사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소득재산 조사방법 및 선정기준 마련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데 기여함
- 2018년 9월 아동수당 시행 초기 정책설계의 합리성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향후 선정체계 개편 등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 설계 및 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사례로 벤치마킹 가능함

## 5. 연구수행체계

□ 본 연구의 전반적인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 2 장

# 아동수당 선정기준 및 자산조사 운영체계

제1절 아동수당 추진배경 및 제도 개요

제2절 아동수당 신청 및 자산조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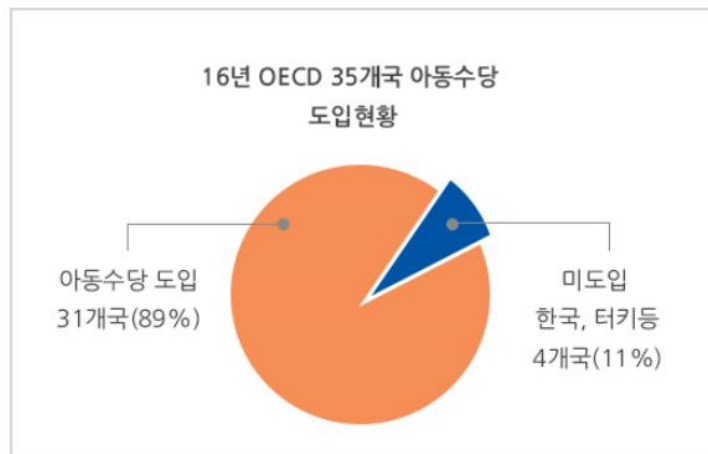
## 2

## 아동수당 선정기준 및 자산조사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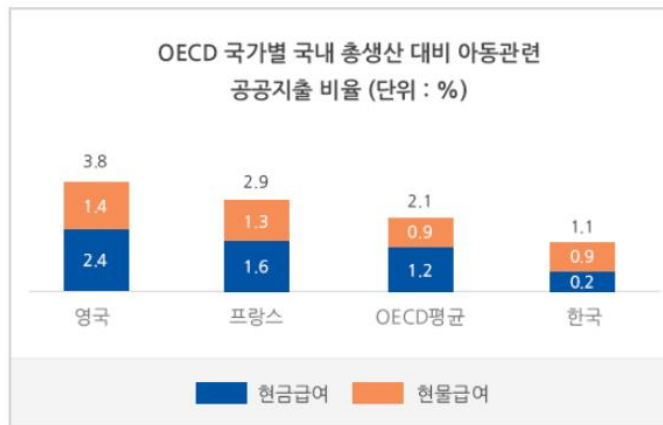
### 제1절 아동수당 추진배경 및 제도 개요

#### 1. 추진배경

-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랜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OECD 주요국 평균 2.1%의 절반 수준인 1.1%
-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



## 2. 제도 개요

### □ 목적 (법 제1조)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 지급 대상 (법 제4조)

-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6세 미만 (0~71개월) 아동
  -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 감액 대상 요건: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원을 더함

#### □ 소득인정액 요건

-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 - 맞벌이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지역 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 다양한 공제제도

- 다자녀 공제: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
- 맞벌이 공제: 부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인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
- \* 공제액 산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맞벌이 공제(안) 예시>					
구분	남편	아내	소득합계	맞벌이 공제	소득인정액
사례1	월500만원	월500만원	월1,000만원	월250만원	월750만원
사례2	월800만원	월200만원	월1,000만원	월200만원	월800만원

- 지역공제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 지급 금액 및 방식 (법 제4조, 제10조)

- 지급 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감액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1인당 월 5만원 지급

- 지급 방식: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지급일: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고향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 말까지 지급

#### □ 국가 등의 책무 (법 제3조)

-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해야 함

-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해야 함

3. 아동수당 업무 흐름도

단 계	업 무 내 용
1. 신청서 작성·상담 (읍면동)	○ 신청 상담 및 안내 - 지급 요건, 가구 구성, 보호자 등 확인
2. 신청 등록 (읍면동)	○ 신청서 등 필수서류 작성 및 제출 - 고지 사항을 반드시 설명하고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서명을 받은 후, 행복e음으로 구비서류 및 가구 구성 확인하여 신청 등록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최초 신청지에서 보관·관리
3. 조사가구 확정 및 접수 (읍면동, 시군구 통합조사팀)	○ 조사대상 가구원 확정 후 접수 처리
4. 공적자료 요청 (시군구 통합조사팀)	○ 접수된 가구에 대한 공적자료 및 금융정보 등 조회 요청
5.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	○ 공적자료 조회 결과 등을 우선 적용하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가구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반영 여부 결정
6. 선정기준액 요건 확인 (시군구 통합조사팀)	○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비교하여 요건 확인
7. 수급자 결정 (시군구 통합조사팀)	○ 수급자 결정 (적합/부적합) - 통합조사팀 조사,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수급 여부 결정 ○ 감액 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종 아동수당 급여액 결정
8. 통보·지급 (시군구 사업 담당)	○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불가피한 경우 90일) 이내에 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우편 등을 통지 - 읍면동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신청자에 대한 지급 결정 여부 확인 ○ 매월 25일 아동수당 지급
9. 수급자 관리 (시군구 사업 담당, 통합조사·관리팀)	○ 아동수당 수급자의 각종 변동사항 관리 - 소득·재산 변동, 인적사항 변동, 수급권 상실, 지급 정지, 급여액 증감, 지급계좌 변경 등 ○ 신고 기관: 관할 읍면동 및 시군구 ○ 확인 방법: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확인 - 본인 신고 시, 변동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 ○ 변경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30일(불가피한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

단 계	업 무 내 용
10. 급여액 환수 (시군구 사업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정 수급 여부를 판단하여, 환수 검토 후 절차 이행</li> <li>○ 환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수대상 확인 → 납부 고지 → 납부 독촉 → 압류(촉탁) → 공경매 처분 → 징수금액 처리 → 종결</li> </ul> </li> <li>○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행위 여부 확인 → 이—견진술 기회 부여 → 과태료 부과 통지 → 압류(촉탁) → 공경매 처분 → 징수금액 처리 → 종결</li> </ul> </li> </ul>
11. 이의신청 (시군구 사업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자격 인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li> <li>○ 기한: 시군구청장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li> <li>○ 신청 기관: 관할 읍면동 및 시군구</li> <li>○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불가피한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li> </ul>

## 제2절 아동수당 신청 및 자산조사 체계

### 1. 아동수당 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 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포함)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 다음의 경우,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 －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제12조)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2. 자산조사

#### □ 일반 원칙

- 소득재산조사는 행복e음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 행복e음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 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담당자 확인에 의한 농·림·어업소득,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 기타 산정되는 재산 등은 소득·재산 항목에서 제외
  -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2호)는 신청 시 작성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작성하도록 함

- 행복e음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 자료제출 시 수정 결과 적용

#### □ 조사의 종류

##### (1) 신청 조사 (시행령 제6조)

- 조사 목적: 아동수당 신청에 따른 보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 조사 대상: 아동 및 그 보호자와 가구원(아동의 부모, 형제자매 등)
- 조사 내용: 아동의 수급자격, 아동 가구의 인적사항, 소득재산조사
- 조사 시기: 아동수당 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 조사 방법: 행복e음을 통한 자료 확인 및 소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 신청 후 조사기간 중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수급자격 여부, 지급액 결정 전에 반영
- 결과 처리: 수급 자격 여부 및 급여액 등을 결정하여 급여 신청자와 대상자에게 통지

##### (2) 확인 조사

- 조사 목적 :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하여 수급권 유지 여부 등을 확인
- 조사 내용 : 아동의 수급자격 및 아동 가구의 인적사항·소득·재산조사
- 조사의 구분
  - 정기 조사: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자료, 금융정보 등 일괄 갱신·반영

- 수시 조사: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입수되는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인적사항·소득·재산 등의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실시
- 변동 신고에 의한 조사: 수급아동의 보호자 등이 인적 사항, 소득·재산, 보호자 변동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아동수당 확인 조사의 범위>

구분		조사 내용	세부 내용
인적사항 변동	인적 변동	보호자·가구원 변동, 수급권 상실, 지급정지	-부모 재혼·이혼, 부모 등의 출산, 가구 원 사망,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조치 등 -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해외 장 기체류 등
소득 인정액	소득	가구원의 소득액 증감	-근로소득: 월 급여액 변동, 취업·퇴사· 이직 등 -사업소득: 사업 소득액의 변동, 사업자 등록, 휴·폐업 등 -재산소득: 연금·이자소득의 발생 및 변동 등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등의 급여액 변동
	재산	가구원의 재산액 증감	-재산 증감(매입·매도 등), 재산가액 변동
급여 관리	관리 행정동	주소지 변경	-전출·입
	급여 지급	계좌	-계좌 변경

#### - 조사 결과 처리

- 수급자격 유지 또는 중지, 급여액 변경, 보호자 변경 등 조치 및 통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이자

까지 포함하여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확인 조사 계획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수급 아동 및 그 보호자와 가구원의 인적사항·소득·재산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확인 조사 계획 수립
- 지자체: 보건복지부 확인 조사 계획의 집행 및 지자체 자율 조사를 위한 시군구 확인 조사 계획 수립

□ 조사면제 및 자동판정

○ 소득·재산조사 면제 (법 제4조 제2항)

- － 개요: 기존 복지급여의 소득·재산조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급자는, 아동수당 신청시 소득·재산조사 없이 수급자로 선정
- － 조사 면제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보장대상 가구원인 아동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아동 및 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보장대상 가구원인 아동
  -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조사대상 가구원인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수급가구 조사대상 가구원인 아동
  - 국토부 국민임대주택사업 수급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인 아동
- － 조치 사항
  - 조사면제 대상 아동은 자동판정 프로세스에서 별도 소득·재

산조사 없이 아동수당 수급자로 조사자 결정 완료

- 원가정 복귀, 소득·재산 변동 등에 따른 수급 탈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사유 및 수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득·재산조사 실시

○ 자동 판정 (법 제9조 제1항)

- 개요: 공적자료 및 금융조회로 입수된 소득·재산(부채는 반영하지 않음)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종결 가능
- 조치사항
  -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조사 면제자 결정 처리, 공적자료 및 금융조회 요청 등 조사 자동화 프로세스가 가동됨
  - 가출, 군 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 처리할 수 없어 조사 대상이나 금융조회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청 등록 시 해당사항 입력



제 3 장

아동수당 2018년 선정기준  
및 수급대상 분포 예측  
분석결과



# 3

## 아동수당 2018년 < 선정기준 및 수급대상 분포 < 예측 분석결과

### 1. 아동수당 개요 및 추진 경과

#### □ 아동수당 개요

- (목적)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지급 대상) 만 0~5세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
  -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아동수당법」 제4조)
- (지급 금액 및 방식) 월 10만원, 현금 지급 원칙
  - \*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시행 시기) 2018년 9월부터 첫 급여 지급
- (소요 예산) 국비 기준 '18년 70백억 원 (지방비 포함 95백억 원)

#### □ 그 동안의 추진 경과

- 아동수당 도입 관련 10개 법안 발의 (~ '17년 9월)
  - \* 「아동수당법」 정부안 제출 ('17년 9월 28일)
-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아동수당법」 제정 ('18년 3월)

- 2인 이상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재산 하위 90% 대상 지급
- 아동수당 소득·재산 조사 및 선정기준 도출 방안 (~ '18년 3월)
  - 분석 DB 구축 및 선정기준(안)별 예상 수급률 비교를 위한 정책 모의분석 실시

## 2.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분석 방법

- 분석 DB 구축 기반 행정데이터
  - 건강보험공단 보유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 소득재산 행정데이터(선정기준 도출) 및 사회보장정보원 보유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신청 0~5세 가구 구성 데이터(아동수당 수급대상 가구의 예상 수급여부 분석) 매칭을 통해 선정기준 및 예상 수급여부 실증 분석
-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소득·재산 추정 분석 및 소득인정액 산출
  - 건강보험공단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구(세대) 단위의 소득·재산 추정 (통계청 조사데이터 기반 추정모형 도출 및 적용)
  -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재산 분포 도출 및 선정기준(안) 기본방향에 따른 다양한 소득·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을 통한 소득인정액 산출
  -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로부터 소득·재산을 반영한 하위 90%에 해당하는 다양한 선정기준(안) 도출 및 비교
- 수급대상 아동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 및 예상 수급여부 분석
  - 수급대상 아동(0~5세)이 있는 가구 데이터를 연계하여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정보로부터 다양한 방식의 공제를 적용한 소득인정액 산출

- 개별 아동가구 특성 및 소득·재산 보유 수준에 따른 수급여부 및 사례 분석
  - 선정기준(안) 적용에 따라 수급대상 아동가구별 예상 수급여부를 판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에 필요한 선정기준(안)별 전체 예상 수급률, 가구 특성 및 지역별 예상 수급률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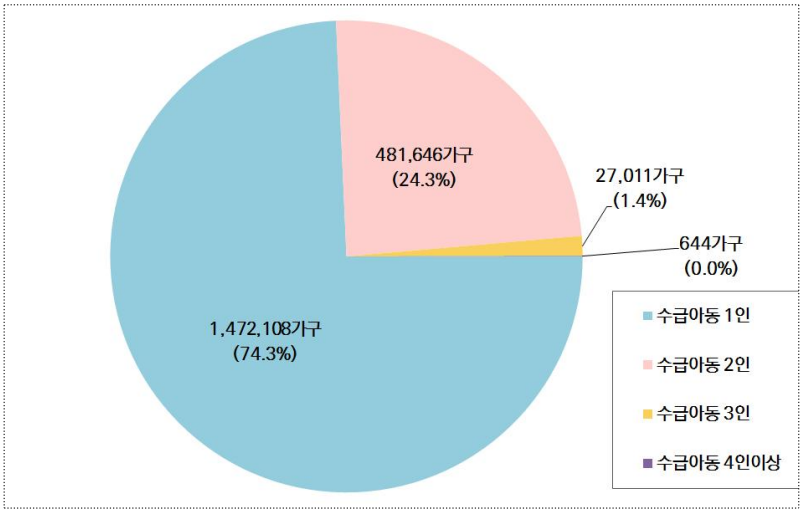
3. 수급대상 아동(0~5세) 가구 특성

○ (전체 수급대상 규모) 분석 DB 기준으로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198만 가구, 0~5세 아동의 수는 가구당 평균 1.3명으로 총 252만 명 추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보미 수급자료 분석  
(’17년 말 기준 2012~2017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

< 수급대상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 >

구분	수급아동 1인	수급아동 2인	수급아동 3인	수급아동 4인 이상	합계
아동가구 수	1,472,108	481,646	27,011	644	1,981,409
비율	74.3%	24.3%	1.4%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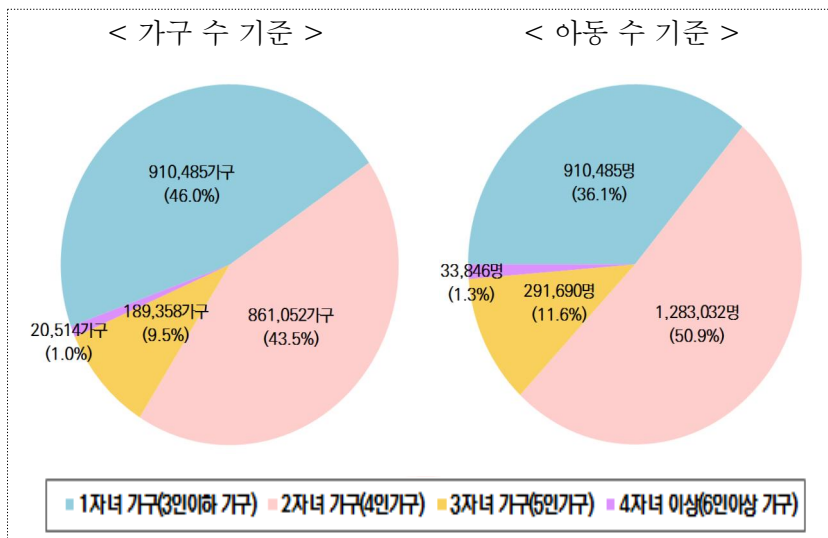


- (가구 규모별 분포) 가구원 수 기준으로는 3인 이하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46.0%), 수급대상 0~5세 아동 수 기준으로는 4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음(50.9%)

\* 한부모 가구인 2인 가구는 약 8만 가구로 전체의 약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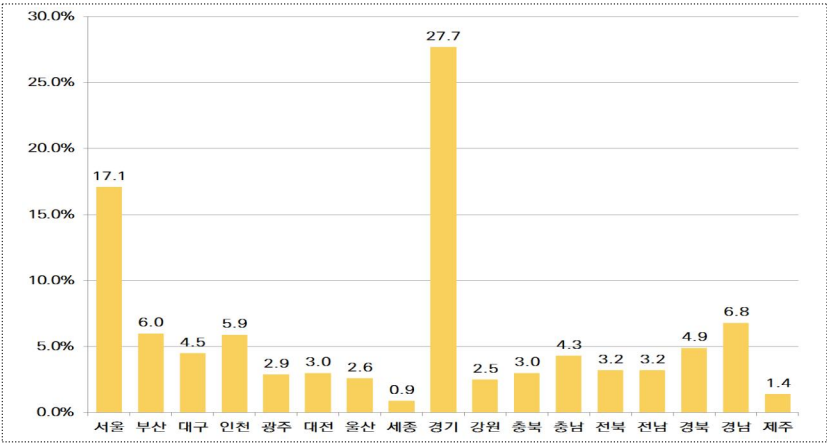
< 가구 규모별 수급대상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 >

구분	1자녀 가구 (3인 이하 가구)	2자녀 가구 (4인 가구)	3자녀 가구 (5인 가구)	4자녀 이상 (6인 이상 가구)	합계
아동가구 수	910,485	861,052	189,358	20,514	1,981,409
비율	46.0%	43.5%	9.5%	1.0%	100.0%
0~5세 아동 수	910,485	1,283,032	291,690	33,846	2,519,053
비율	36.1%	50.9%	11.6%	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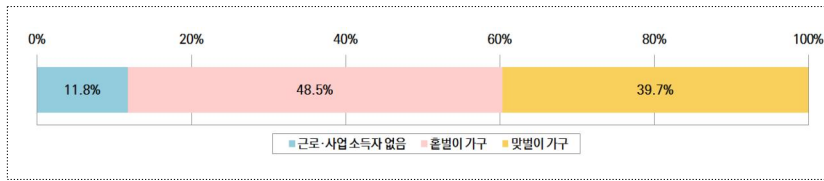
○ (지역 분포) 수급대상인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서울과 경기  
에 약 45%가 분포

구분	아동가구 수	비율	구분	아동가구 수	비율
서울	338,369	17.10%	경기	548,877	27.70%
부산	118,309	6.00%	강원	50,249	2.50%
대구	89,836	4.50%	충북	59,926	3.00%
인천	117,416	5.90%	충남	85,217	4.30%
광주	58,067	2.90%	전북	63,110	3.20%
대전	59,942	3.00%	전남	63,986	3.20%
울산	50,776	2.60%	경북	96,317	4.90%
세종	18,132	0.90%	경남	135,339	6.80%
			제주	27,541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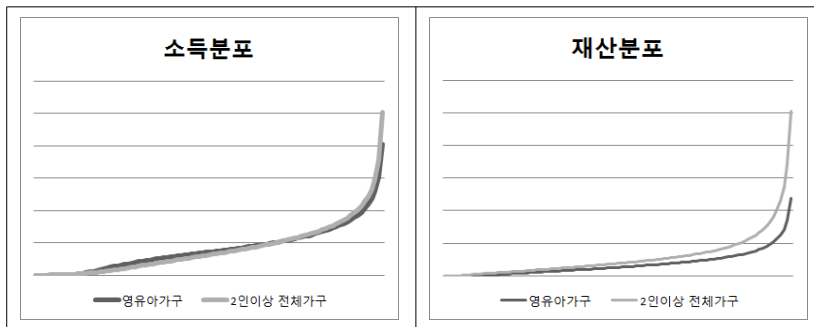
○ (부모의 소득활동별 분포) 홀벌이 가구 48.5%, 맞벌이 가구 39.7%

구분	근로·사업 소득자 없음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합계
아동가구 수	234,219	960,422	786,768	1,981,409
비율	11.8%	48.5%	39.7%	100.0%



○ (소득·재산 분포 비교) 2인 이상 전체 가구에 비해 수급대상 0~5세 아동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남

-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총 소득 및 순 자산(재산) 분포의 하위 90%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급대상 아동가구(4인 가구 기준)의 소득 수준은 하위 91.9%, 순 자산은 하위 96.5% 수준으로, 소득보다는 재산이 더 낮게 나타남



40 아동수당 소득재산 조사방법 및 선정기준 도출 연구

소득 (4인 가구 기준)				재산 (4인 가구 기준, 순자산)			
누적 비율	2인 이상 전체가구 (월, 만원)	누적 비율	0~5세 아동가구 (월, 만원)	누적 비율	2인 이상 전체가구 (억원)	누적 비율	0~5세 아동가구 (억원)
...		...		...		...	
89%	957	89%	889	89%	6.8	89%	4.2
90%	997	90%	922	90%	7.2	90%	4.4
91%	1,042	91%	959	91%	7.7	91%	4.6
92%	1,093	91.9%	997	92%	8.2	92%	4.9
93%	1,152	92%	1,000	93%	8.9	93%	5.2
94%	1,225	93%	1,048	94%	9.8	94%	5.6
95%	1,315	94%	1,105	95%	10.9	95%	6.1
96%	1,435	95%	1,178	96%	12.4	96%	6.7
97%	1,611	96%	1,272	97%	14.7	96.5%	7.2
...		...		...		97%	7.7

## 4. 선정기준 도출 기본 모형

$$\begin{aligned}
 & *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 * \text{소득평가액} = \text{총 소득} - \text{맞벌이 공제} - \text{다자녀 공제} \\
 &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text{총 자산} - \text{일반재산 기본공제액} - \text{부채}) \\
 & \quad \times \text{재산의 소득환산율} \div 12\text{개월}
 \end{aligned}$$

## 가. 소득 공제

-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홀벌이 - 맞벌이 간 아동수당 수급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아동가구의 소득에 대한 평가 시 맞벌이와 다자녀에 대한 공제 도입 필요
- 맞벌이 공제는 근로·사업 소득의 25%를 반영하고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舊 영유아보육 방식과 동일)

< 부부 근로·사업 소득에 따른 맞벌이 공제 예시 >

구분	남편	아내	소득합계	맞벌이 공제	소득인정액
사례 1	월 500만원	월 500만원	월 1,000만원	월 250만원	월 750만원
사례 2	월 800만원	월 200만원	월 1,000만원	월 200만원	월 800만원

- 다자녀 공제는 자녀 양육비용\* 등을 고려해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반영 (2자녀 65만원, 3자녀 130만원, 4자녀 195만원)

\* 가구원수에 반영되는 일상적 생활비 및 보육·교육·돌봄 비용 등 고려

\*\*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월 64.8만원 ('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조사, 보사연)

☞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재산 하위 90% 이하에 지급” 등 법률상 선정기준 요건 충족을 위해, 전체 가구에도 맞벌이 및 다자녀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선정기준액 일부 감소\*

\* 재산의 소득환산율 12.5% 적용 시, 4인 가구 기준 월 92만원 감소

#### 나. 재산 공제

○ 지역별 생활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재산총액에서 일반재산에 대해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을 제외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수준 : 특별·광역시 13,500만 원, 市 지역 8,500만 원, 郡 지역 7,250만 원  
(기초연금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 법률상 선정기준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전체 가구에도 기본재산 공제를 반영함에 따라 표면적인 소득인정액 감소효과로 선정기준액도 감소\*

\* 재산의 소득환산율 12.5% 적용 시, 4인 가구 기준 월 167만원 감소

## 5.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및 수급가구 비교

○ (선정기준①)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기초연금 소득환산율)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869만 원	월 1,067만 원	월 1,264만 원	월 1,462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월 769만 원, 3억 원 이하	월 967만 원, 3억 원 이하	월 1,164만 원, 3억 원 이하	월 1,362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869만 원	월 1,067만 원	월 1,264만 원	월 1,462만 원
재산만 있는 경우	26.1억 원	32.0억 원	37.9억 원	43.8억 원

\* 맞벌이 및 다자녀공제, 기본재산공제 미적용 사례로, 가구특성 및 지역에 따라 공제 수준만큼 더 높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도 수급 가능

○ (선정기준②)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12.5% 적용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	월 1,151만 원, 3억 원 이하	월 1,390만 원, 3억 원 이하	월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 원	13.8억 원	16.3억 원	18.9억 원

○ (선정기준③)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16.7% 적용(舊 영유아보육 소득환산율)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327만 원	월 1,628만 원	월 1,930만 원	월 2,231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월 910만 원, 3억 원 이하	월 1,211만 원, 3억 원 이하	월 1,513만 원, 3억 원 이하	월 1,814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1,327만 원	월 1,628만 원	월 1,930만 원	월 2,231만 원
재산만 있는 경우	9.5억 원	11.7억 원	13.9억 원	16.0억 원

○ (수급률 비교)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높을수록 예상 수급률은 다소 증가\*하나, 재산을 적게 보유하는 아동가구의 특성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12.5%와 16.7% 적용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2인 이상 전체 가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아동가구의 소득 수준보다 재산 수준이 더 낮은 것이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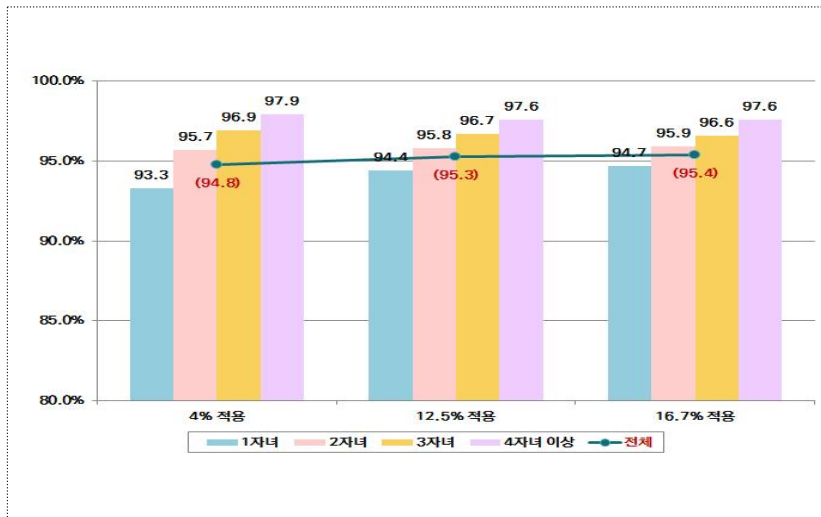
구분	4% 적용	12.5% 적용	16.7% 적용
가구 기준 예상 수급률	94.8% (93.4%)	95.3% (93.9%)	95.4% (94.0%)
아동 기준 예상 수급률	95.2% (93.8%)	95.6% (94.2%)	95.7% (94.3%)

\* (괄호)는 보육료 등 신청률 98.5% 가정 시, 실제 수급가구 비율 예상치

○ (자녀 수별 예상 수급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수급률은 증가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따른 예상 수급률 차이는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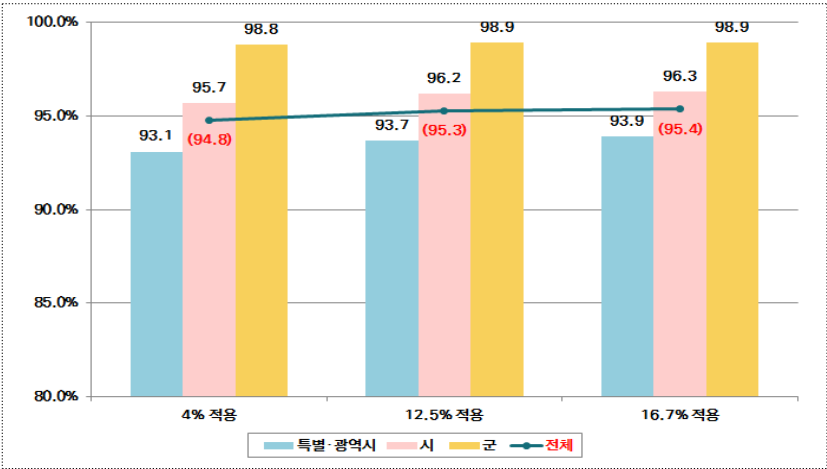
\* 다만 1자녀의 경우 소득환산율 4% 적용 시, 다른 방안에 비해  
수급률이 다소 낮음 (12.5% 적용 대비 1.1p%↓)

소득형태별 구분		4% 적용	12.5% 적용	16.7% 적용
가구 기준 예상 수급률	1자녀	93.3%	94.4%	94.7%
	2자녀	95.7%	95.8%	95.9%
	3자녀	96.9%	96.7%	96.6%
	4자녀 이상	97.9%	97.6%	97.6%
	전체	94.8%	95.3%	95.4%



○ (지역별 예상 수급률) 君 지역의 경우 어떤 선정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약 99%의 수급 예상, 市 지역은 95.7%~96.3%, 특별시·광역시는 93.1%~93.9% 수급 예상됨

지역별 구분		4% 적용	12.5% 적용	16.7% 적용
가구 기준 예상 수급률	특별·광역시	93.1%	93.7%	93.9%
	시	95.7%	96.2%	96.3%
	군	98.8%	98.9%	98.9%
	전체	94.8%	95.3%	95.4%



## □ 최종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제안

- 선정기준 ①안의 경우 소득활동이 활발한 중산층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탈락하는 반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재산이 많은(20~40억) 가구는 아동수당을 수급할 수 있게 되므로 다소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
- 선정기준 ③안의 경우 재산의 가치를 높게 산정하여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아동가구에 유리한 방식이나, 실제 적용 결과 ②안에 비해 수급률 차이는 크지 않음
  - 반면 시장이자율 등을 고려할 때 재산을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고 있어 저축이나 투자를 열심히 하는 중산층 맞벌이 가구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 현행 복지제도에서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기준으로 타 제도와 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한계점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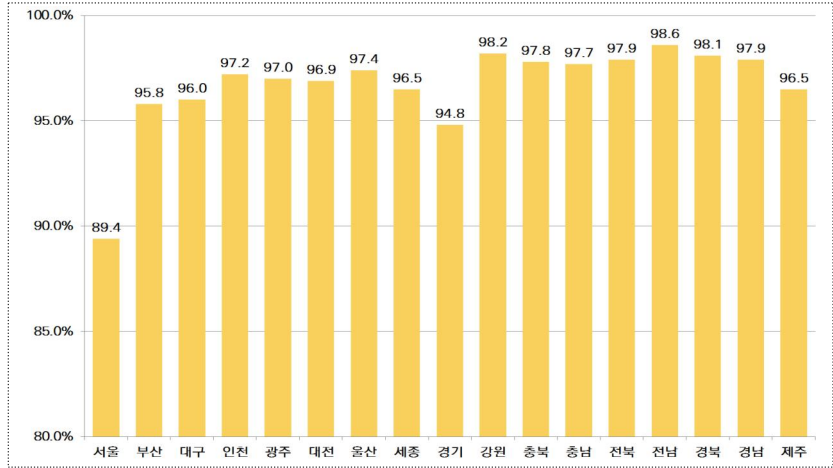
구분	①안 (4% 적용)	②안 (12.5% 적용)	③안 (16.7% 적용)
가구 기준 예상 수급률	94.8% (93.4%)	95.3% (93.9%)	95.4% (94.0%)
아동 기준 예상 수급률	95.2% (93.8%)	95.6% (94.2%)	95.7% (94.3%)

\* (괄호)는 보육료 등 신청률 98.5% 가정 시, 실제 수급가구 비율 예상치

☞ 복지제도 내에서 현행 주거용 재산에 적용하는 환산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②안(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12.5%, 월 1.04%)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이를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으로 제안함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 참고 : ②안 소득환산율 12.5% 적용 시 시도별 예상 수급률 >



## &lt; 참고 : ②안 소득환산율 12.5% 적용 시 사례 &gt;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 소득 - 맞벌이 공제\* - 다자녀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자산 - 일반재산 기본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부부 합산 소득의 25%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 특별·광역시 1.35억원, 시(市) 지역 0.85억원, 군(君) 0.725억원

① 남편(월 소득 800만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1명(2세)을 양육하면서, 광역시 소재 자가 주택(공시지가 2.5억원)에 거주하고 저축(0.5억원)을 하고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 800만원 + [(2.5억원 + 0.5억원) - 1.35억원] ×  
12.48% ÷ 12개월 = 971만원

☞ 3인 가구 선정기준액 1,170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므로  
아동수당 10만원 수급 가능

② 남편(월 소득 200만원)과 아내(월 소득 500만원)가 자녀 1명(4세)을 양육하면서, 군(君) 소재 주택에 전세(보증금 1억원)로 거주하면서 저축(1억원)을 하고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 200만원 + 500만원 - 175만원 + (1억원 + 1억원  
- 0.725억원) × 12.48% ÷ 12개월 = 657만원

☞ 3인 가구 선정기준액 1,170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므로  
아동수당 10만원 수급 가능

- ③ 남편(월 소득 1,000만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3명(4세, 7세, 8세)을 양육하면서, 시(市) 소재 자가 주택(공시지가 3억원)에 거주하는 경우

$$\begin{aligned} \text{○ 소득인정액} &= (1,000\text{만원} - 130\text{만원}) + (3\text{억원} - 0.85\text{억원}) \times \\ &12.48\% \div 12\text{개월} = 1,093\text{만원} \end{aligned}$$

☞ 5인 가구 선정기준액 1,702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므로  
4세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10만원 수급 가능

- ④ 남편(월 소득 500만원)과 아내(월 소득 500만원)가 자녀 1명(5세)을 양육하면서, 서울 소재 자가 주택(공시지가 4억원, 주택담보대출 1억원)에 거주하며 저축(1억원)을 하고, 자동차(3,500만원)를 보유한 경우

$$\begin{aligned} \text{○ 소득인정액} &= (1,000\text{만원} - 250\text{만원}) + \{(4\text{억원} - 1.35\text{억원}) + \\ &1\text{억원} + 0.35\text{억원} - 1\text{억원}\} \times 12.48\% \div 12\text{개월} \\ &= 750\text{만원} + 312\text{만원} = 1,062\text{만원} \end{aligned}$$

☞ 3인 가구 선정기준액 1,170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므로  
수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아동수당 10만원 수급 가능

- ⑤ 남편(월 소득 600만원)과 아내(월 소득 600만원)가 자녀 2명(5세, 2세)을 양육하면서, 서울 소재 전세 주택(전세보증금 6억원, 전세대출 1.5억원)에 거주하며 저축(2억원)을 하고, 자동차(3,500만원)를 보유

$$\begin{aligned} \text{○ 소득인정액} &= (1,200\text{만원} - 300\text{만원} - 65\text{만원}) + \{(6\text{억원} - 1.35\text{억원}) + 2\text{억원} + 0.35\text{억원} - 1.5\text{억원}\} \times \\ &12.48\% \div 12\text{개월} \\ &= 835\text{만원} + 572\text{만원} = 1,407\text{만원} \end{aligned}$$

☞ 4인 가구 선정기준액 1,436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므로 아동수당 대상으로 선정, 또한, 자녀 2인 감액구간 적용 시에도 전액급여 구간에 해당하여 아동수당 20만원 수급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 6. 감액구간 적용 필요성 및 방안 검토

○ (감액구간 도입)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짐을 방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아동수당급여액”인 가구의 지급금액 감액

- (방안 ①) 수급아동 1인당 2만원 단위, 5개 구간 적용 → 감액 대상자는 1.8천 가구(2.2천 명) 예상

소득인정액	~ 1,428만원	1,428만원 ~ 1,430만원	1,430만원 ~ 1,432만원	1,432만원 ~ 1,434만원	1,434만원 ~ 1,436만원
4인 가구 아동 1인 수급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소득인정액	~ 1,420만원	1,420만원 ~ 1,424만원	1,424만원 ~ 1,428만원	1,428만원 ~ 1,432만원	1,432만원 ~ 1,436만원
4인 가구 아동 2인 수급	20만원	16만원	12만원	8만원	4만원

\* (예시) 선정기준 ②안으로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월 1,436만 원인 경우

- (방안 ②) 수급아동 1인당 5만원 단위, 2개 구간 적용 → 감액 대상자는 1.1천 가구(1.4천 명) 예상

소득인정액	~ 1,431만원	1,431만원 ~ 1,436만원
4인 가구 아동 1인 수급	10만원	5만원

소득인정액	~ 1,426만원	1,426만원 ~ 1,436만원
4인 가구 아동 2인 수급	20만원	10만원

\* (예시) 선정기준 ②안으로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월 1,436만 원인 경우

☞ 감액구간 미적용 시 아동수당 수급으로 소득 역전이 커질 우려가 있으나, 아동수당의 경우 선정기준액 자체가 높아 감액 대상자 비중은 매우 낮음 (예상 수급가구의 0.06~0.09% 추정)

- 수급 & 비수급 가구 간 소득역전을 줄이기 위해 감액구간 운영이 필요하다면,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단순한 형태로 제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방안② (5만원 단위 감액) 적용 제안

제 4 장

아동수당 신청 및 수급대상  
선정 현황



# 4

## 아동수당 신청 및 수급대상 선정 현황

□ 아동수당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현황을  
제시함

□ 올 해 0~5세 아동은 2,498,996명이고, 3개월 간(9월~11월) 신청  
한 아동 수는 2,400,609명으로 96.1%의 신청률을 보임

대상 아동 수 (A)	신청 아동 수 (B)	신청률 (B/A)
2,498,996명	2,400,609명	96.1%

□ 아동 수당을 신청한 240만 명 중 92.1%인 2,210,401명에게 3개월  
간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신청 아동 중 96,630명(4.0%)는 소  
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11월분 지급 아동 수는 215만명

\* 연령기준상 10월까지만 받았던 '12.10~11월생 제외 시 11월  
지급자 수 215만 명 (=221만 명 - 6만 명)

신청 아동 수 (A)	지급 아동 수 (B)	지급률 (B/A)	지급제외 아동 수 (C)	제외율 (C/A)
2,400,609명	2,210,401명	92.1%	96,630명	4.0%

-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 명이 있음(9~11월 누적치)
- 해당 아동의 경우,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는데, 9월 내에 신청했으나 11월에 지급이 결정되어 3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5.3만 명 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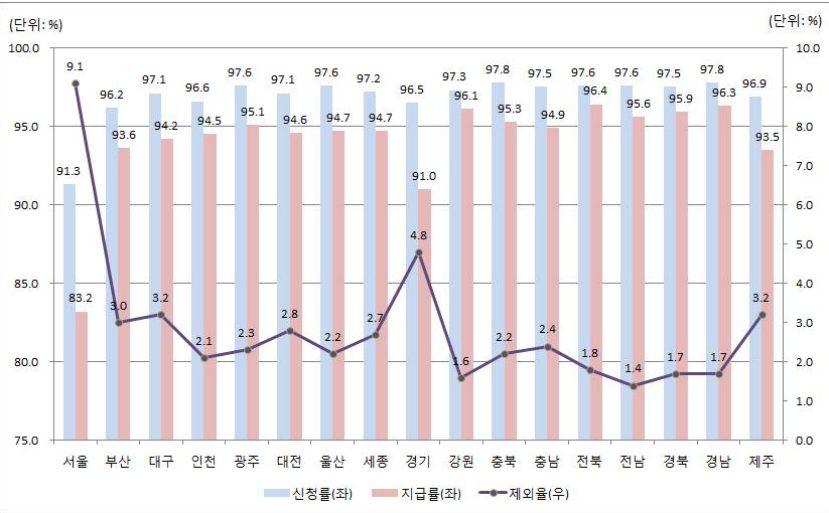
구분	신청	지급	제외	지급여부 미 결정자		
				소계	금융재산 조회 중	지자체 조사 중
아동 수	240만 명	221만 명*	9.7만 명	9.3만 명	3.0만 명	6.3만 명
비율	100%	92.1%	4.0%	3.9%	1.2%	2.6%

- 한편,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을 대상으로 10월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을 완료하였음
-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에 대해서는 추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하게 됨
  -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1건 발견되어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조치되었으며, 장애·부모부재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조치를 진행 중에 있음
  - 그 외에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 및 주소지 노출을 우려하여 신청을 거부

< 아동수당 미신청 저소득 복지수급가구 전수조사 결과 >

계	신청 완료		미 신청		
	직접신청	대리신청	연락두절	신청거부	기타 (해외입양, 전출 등)
600명	338명	20명	138명	47명	57명

□ 아동수당 지역별 신청 및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90% 이상의 신청율 및 지급율을 나타냄





제 5 장

아동수당 2019년  
선정기준(안) 추정 결과



# 5

## 아동수당 2019년 < 선정기준(안) 추정 결과 <

### 1. 2019년 아동수당 선정기준 도출 기본모형

□ 2019년 아동수당 선정기준 도출 방식은 2018년 아동수당 도입 당시 제시하여 실제 수급대상 선정에 적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식을 활용함

#### ○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재산 하위 90% 이하에 지급” 한다는 법률상 선정기준을 위해, 공적 행정데이터 기준의 전체 가구 대상 분석 DB를 구축하여 각종 공제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여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한 후, 1인 가구를 제외한 2인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 분포로부터 선정기준을 도출함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다양한 대안별 비교 검토를 통하여 2018년 선정기준에 적용한 연간 12.48%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용재산 환산율과 동일한 월 1.04% 수준임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 소득 - 맞벌이 공제 - 다자녀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자산 - 일반재산 기본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간 12.48% (월 1.04%)

○ 소득공제 적용방식

-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홀벌이 - 맞벌이 간 아동수당 수급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아동가구의 소득에 대한 평가 시 맞벌이와 다자녀에 대한 공제 도입 필요
- 맞벌이 공제
  - 근로·사업 소득의 25%를 반영하고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함
- 다자녀 공제
  - 자녀 양육비용 등을 고려해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적용하여, 2자녀일 경우 65만원, 3자녀 130만원, 4자녀 195만원을 공제함
  - 가구원수에 반영되는 일상적 생활비 및 보육·교육·돌봄 비용 등 고려하여 자녀 1인당 양육비용으로 65만원을 산출함

○ 재산공제 적용방식

- 지역별 생활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재산총액에서 일반재산에 대해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을 제외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함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수준은 특별시·광역시 13,500만원, 도의 시 8,500만원, 도의 군 7,250만원으로 기초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함

## 2. 2019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 □ 2019년 아동수당 선정기준 조정안

○ 2019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9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가구균등화 지수에 따라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12.45%(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 기준 중위소득 산출 시 적용되는 가구 균등화 지수 적용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8년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2019년 아동수당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1,287만원 (10.0%↑)	1,580만원 (10.0%↑)	1,872만원 (10.0%↑)	2,165만원 (10.0%↑)

○ 공제 적용에 따른 선정기준 비교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9년 아동수당 선정기준 (모든 공제 적용)	1,287만원	1,580만원	1,872만원	2,165만원
소득/재산공제 미적용	1,571만원	1,928만원	2,285만원	2,642만원
소득공제 미적용 재산공제만 적용	1,485만원	1,823만원	2,160만원	2,498만원

\* 소득공제: 맞벌이 공제, 다자녀 공제

\* 재산공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 부 록 <

### 부록1. 아동수당 자산조사 간소화 관련 자동판정 적용 모의 분석: 전월세거래정보 없는 가구에 대한 조사자동화

#### 1. 검토배경

- 아동수당이 90% 이하에 지급됨에 따라, 짧은 기간(7월말~9월초) 동안 198만 아동가구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어야 함
  - 시군구 통합조사팀의 업무부담은 매우 과중할 것으로 예상됨
  - 소득·재산 조사의 지연이 우려되며, 전체 아동가구 중 50~70%만 9월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소득·재산 조사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 경감을 추진중이나, 자동화 가능한 대상자는 전체의 50~60% 수준으로 추정됨
  - 그 중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보가 없어 담당자가 조사해야하는 대상이 전체의 22%, 52만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조사자동화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비율 >

조사자동화 제외사유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의 70% 초과	고급자동차 등 고가재산 보유	주거재산 관련 공적자료 부재	기타 담당자 확인 필요	조사자동화 제외자 합계
대상자 비율	18%	2% 미만	22%	5~10% 추정	40~50% 추정

\* 22% 추정근거 : 아동가구 중 전월세자 비율 42% \* 국토부 전월세거래 정보 없는 대상자 40% + 아동가구 중 무료임차자 등 비율 5%

< 기타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① 담당자가 가액을 확인하는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보유자
-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사업·임대소득 없는 자
- ③ 국외 소득·재산 신고가 필요한 외국인·재외국민
- ④ 업무 프로세스상 자동화가 어려운 경우
  - ▲타보증 동시 신청·조사, ▲다른 보증 조사진행중, ▲통조표 2개 이상, ▲금융조회동의서 오류, ▲조사자동화 중 담당자 수정 등
  - \* 조사자동화 시행중인 초중고 학비지원 사업의 경우 약 40%가 해당 사유로 자동화 제외

## 2. 개선방안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전월세 거래정보의 활용

- 공적자료에 소유주택 등 다른 주거재산이 없으며 동일 읍면동에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
  - 계약연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2년에 9% 임차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의 70% 이하이면 자동판정
  -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해지의 의사표현이 없으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되며 그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음을 감안
  -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보증금 증가분은 재계약시 9% 이내로 제한됨
  - 계약 후 5년간 데이터(계약만료후 3년)를 활용, 계약만료후 2년 이상 경과시 다시 9% 증액한 금액 반영

## ②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 중 읍면동 임차보증금 최고가액 적용

○ 읍면동 최고가액을 해당 가구의 임차보증금으로 가정하고 반영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이면 자동판정

\* 해당 읍면동 데이터가 없거나 30건 미만이면 시군구 최고가액 반영

## 3. 적용방안

## ① 읍면동 임차보증금 최고가액의 기준 적용방안

## ① 방안 1 : 등록된 임차보증금 중 실제 최고가액

최고가액 구분	2억원 미만	2~4억 원	4~6억 원	6~8억 원	8~10억 원	10억원 이상	합계
읍면동 수	839	1,376	566	304	166	312	3,563
해당 지역 아동수	163,960	837,204	533,098	287,294	165,219	354,270	2,341,045
해당 지역 아동비율	7.0%	35.8%	22.8%	12.3%	7.1%	15.1%	100.0%

## ② 방안 2 : 99.87% 수준의 통계적 최고가액 (평균 + 표준편차 x 3)

최고가액 구분	2억원 미만	2~4억원	4~6억 원	6~8억 원	8~10 억원	10억원 이상	합계
읍면동 수	1,631	1,283	414	131	52	52	3,563
해당 지역 아동수	402,730	1,171,010	515,183	153,264	47,292	51,566	2,341,045
해당 지역 아동비율	17.2%	50.0%	22.0%	6.5%	2.0%	2.2%	100.0%

③ 방안 3 : 99.997% 수준의 통계적 최고가액 (평균 + 표준편차 x 4)

최고가액 구분	2억 원 미만	2~4억 원	4~6억 원	6~8억 원	8~10억 원	10억원 이상	합계
읍면동 수	1,221	1,364	560	215	102	101	3,563
해당 지역 아동수	227,867	966,678	683,273	251,881	116,423	94,923	2,341,045
해당지역 아동비율	9.7%	41.3%	29.2%	10.8%	5.0%	4.1%	100.0%

② 적용방안에 따른 파급효과

○ 주거재산이 없는 가구 중 약 40~55%가 자동판정될 수 있을 전망

구분	전체 아동수	주거재산 없는 가구 아동수	최고가액 적용시 자동판정 대상자			효과성 검토	
			아동수	주거 재산 없는 아동 대비 비율	전체 아동 대비 비율	최고 가액 초과 아동수	담당자 충원대체 효과
방안1	2,341,045	515,030	203,889	39.6%	8.7%	모름	327명
방안2	2,341,045	515,030	287,236	55.8%	12.3%	670명	460명
방안3	2,341,045	515,030	246,161	47.8%	10.5%	15명	394명

\* 담당자 충원대체 효과 : 최고가액 반영으로 자동화되는 물량을  
담당자가 3개월 동안 처리할 경우 필요한 인력을 산출

○ 실제 등록된 최고가액보다 통계적 최고가액이 더 높은 지역도 적  
지 않게 나타남

구분	'방안 1'과 '방안 2' 최고가액 비교		방안 1과 방안 3 비교	
	방안 1 > 방안 2	방안 1 < 방안 2	방안 1 > 방안 3	방안 1 < 방안 3
읍면동 수	3,098	2,060,782	2,283	1,280
아동수	465	280,263	1,417,205	923,840

○ 인구가 밀집되어 아동이 많고, 전월세 가액이 높은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통계적 최고가액 적용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남

시도	아동수	주거재산 없는 아동수	최고가액 적용시 자동판정 대상자		
			방안 1	방안 2	방안 3
강원도	59,686	13,131	8,499	9,339	8,885
경기도	646,212	142,167	46,105	73,475	59,980
경상남도	160,654	35,344	19,248	23,561	21,539
경상북도	114,649	25,223	15,203	17,759	16,603
광주광역시	69,674	15,328	7,437	9,650	8,747
대구광역시	105,904	23,299	11,168	13,243	11,262
대전광역시	70,802	15,576	7,095	9,902	8,726
부산광역시	139,276	30,641	10,619	17,896	15,336
서울특별시	390,260	85,857	10,879	28,298	19,019
세종시	23,052	5,071	2,019	3,250	2,912
울산광역시	60,266	13,259	6,725	7,927	6,985
인천광역시	137,161	30,175	11,940	17,744	14,866
전라남도	78,831	17,343	10,003	12,490	11,959
전라북도	76,146	16,752	10,349	11,662	11,045
제주도	33,726	7,420	3,642	4,592	3,940
충청남도	102,475	22,545	13,437	15,565	14,197
충청북도	72,271	15,900	9,522	10,885	10,162
총합계	2,341,045	515,030	203,889	287,236	246,161

－ 전월세 가액이 매우 높은 서울 강남구 등에는 효과가 없으나,  
서울 강북구, 경기 수원시, 화성시 등에서는 통계적 최고가액  
적용시 주거재산 없는 가구 중 50% 이상 자동판정 가능

시군구	아동수	주거재산 없는 아동수	최고가액 적용시 자동판정 대상자		
			방안 1	방안 2	방안 3
서울 강남구	20,915	4,601	0	90	0
서울 강동구	17,833	3,923	188	1,194	592
서울 강북구	10,569	2,325	626	1,359	1,110
경기 성남시	41,892	9,216	995	2,439	1,745
경기 수원시	61,349	13,497	4,977	7,084	5,647
경기 화성시	52,959	11,651	3,726	6,256	5,250

#### 4. 검토의견

- 통계적 최고가액을 적용하는 ‘방안 2’로 추진
  - \* ‘최고가액 = 평균 + 표준편차 x 3’ 적용. 99.87% 확률의 최고가액
- 지자체 조사 업무부담 및 국민불편\*을 최대한 경감하고 9월 급여 지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 특히, 통합조사팀의 업무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인구밀집 지역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방안 2’로 추진 필요
  - \* 자동판정 대상자가 되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불필요
- 반면, 읍면동 최고가액을 초과하여 부적정급여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됨
  - ① 임차보증금 가액이 높을수록 재산권 방어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을 하기 때문에, 전월세 거래정보가 없는 대상자의 임차보증금 가액은 평균보다도 낮을 것으로 판단됨
  - ② 임차보증금 가액이 읍면동 최고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부적정 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음
    - \* (1)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만 자동판정, (2)부채는 제외하고 반영, (3)소명과정에서 중복반영된 소득·재산 등 제외
  - ③ 매년 2차례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전월세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변동을 모니터링함
- 지나친 조사에 의해 지자체 업무부담과 국민불편 등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수당법 제9조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만으로 판정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 &lt; 아동수당법 제9조 : 공적자료로 조사종결 &gt;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① ... 이 경우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평가한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lt;참고&gt; 국토부 전월세 거래정보 분석내역

○ (자료내역) 지난 3년간 확정일자가 부여되었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전월세 거래정보 총 560만건

\* 자료양식 : 등록일, 법정동 코드, 보증금 가액, 전월세 구분

- 법정동 기준 자료이며, 행안부 기준 행정동으로 매칭하여 분석

\* 행정구역 말소, 코드오류 등으로 매칭되지 않는 12만건 제외

- 오류 가능성이 높은 임차보증금 100만원 이하, 100억원 초과 물건은 약 1만건 반영제외

\* 가액 7000억원 물건, 가액 1원 물건 등 단위 입력 오류로 추정됨

○ (물건 건수) 읍면동별 물건이 30건 이하인 경우, 시군구 전체 물건 데이터로 치환하여 최고가액 등 적용

## &lt; 읍면동별 임차보증금 물건 건수 분포 및 해당지역 아동수 합계 &gt;

구분	물건 없음	0~30건	30~100건	100~500건	500~1000건	1000~2000건	2000건 이상	합계
읍면동수	118	782	351	408	1442	226	236	3,563
아동수	2,942	40,269	263,894	115,617	1,775,498	22,567	120,258	2,341,045

\* 물건 30건 이하 읍면동은 대부분 농어촌 군 지역. 해당 900개 읍면동의 아동수는 총 43천명에 불과함

<참고> 아동수당 ‘읍면동’ 전월세 표준가 산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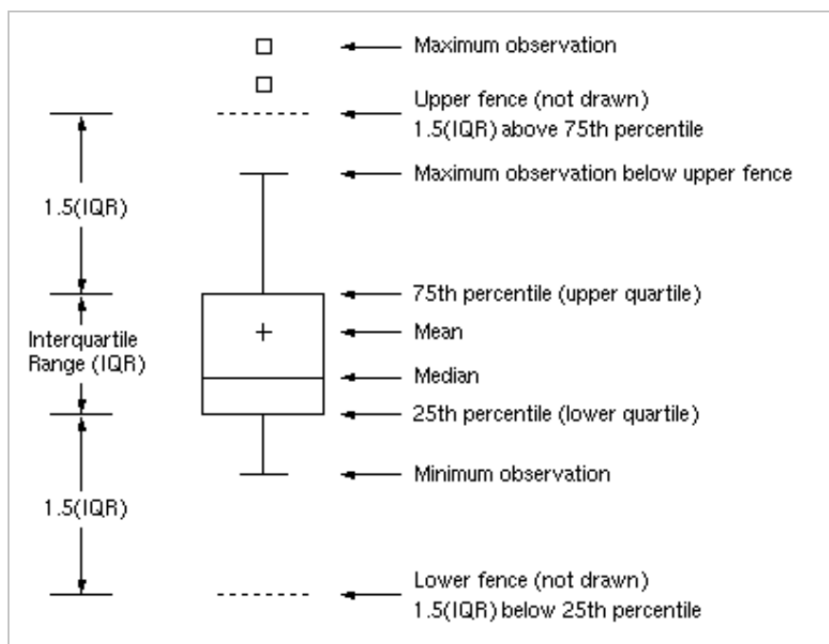
□ 아동수당 급여 신청자의 조사자동화 시 참고할 전국 읍면동 전월세 표준가 산정 절차를 정리함

□ 산정절차

- (step 1) 국토부 전월세 가격 입수(법정동 기준자료)
- (step 2) 국토부 자료와 행안부 ‘행정동-법정동’ 매핑 자료 매칭하여 행정동 기준 표준가 산정 모수 data group(table 1)생성
  - 국토부(법정동) 항목과 행안부(법정동) 항목을 db join.
  - 물건값 100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만 별도 추출
- (step 3) table 1 자료를 이용하여 행안부 행정동 코드 기준 평균, 표준편차, 4분위값(1/4, 중위. 3/4) 산출
  - 평균 : AVG 함수 사용
  - 표준편차 : STDDEV 함수 사용
  - 중위값 : median 함수 사용
  - 1/4분위값 : 행정동 코드 기준 percaentile\_cont(0.25) 함수 사용
  - 3/4분위값 : 행정동 코드 기준 percaentile\_cont(0.75) 함수 사용
- (step 4) 행정동 기준 산출값을 활용하여 3시그마, IQR1.5, IQR3 값 산출

- 3시그마 : 평균+(표준편차\*3)
- $IQR*1.5$  :  $3/4$ 분위값+( $3/4$ 분위값- $1/4$ 분위값)\*1.5
- $IQR*3$  :  $3/4$ 분위값+( $3/4$ 분위값- $1/4$ 분위값)\*3

※ Box plot을 이용하여 중위값의 위치로 분포 상의 중심을 파악할 수 있으며, IQR을 통하 최소·최대값으로 분포 상의 꼬리부분 또는 이상치를 파악할 수 있음



- 최대(Maximum), 최소(Minimum), 평균(Mean, +표시)
- 4분위로 구분하여, 1분위(Q1, 하위 25%, Lower quartile), 2분위(Q2, 하위 50%, 중위, Median), 3분위(Q3, 하위 75%, Upper quartile) 경계값 제시

- IQR(Interquartile Range,  $Q3-Q1$ 으로 계산) 중심으로 Upper fence와 Lower fence를 벗어나는 이상치를 확인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함
- (step 5) step 3~4의 결과를 참고하여 ‘시군구’ 기준 표준가 산출
- (step 6) ‘읍면동’ 기준 표준가 자료 중 ‘읍면동’별 물건 수 ‘100’건 이하 ‘읍면동’에 대해 ‘시군구’ 표준가 치환
- (step 7) ‘읍면동’ 기준 표준가 자료 중에서 행정동 코드가 ‘시군구’인 자료(행정동 코드 뒷 5자리가 모두 ‘00000’인 자료), ‘시군구’ 표준가로 치환
- (step 8) 국토부 원본 자료에도 포함되지 않아 행정동 매칭 불가능한 ‘행정동 코드’(시도, 지자체별 출장소)는 ‘치환불가’(N/A) 상태로 유지(42개 행정동 코드)
- (step 9) 최종 결과값의 IQR1.5 항목 중 ‘135,000,000’만원 이하 읍면동의 경우 모두 ‘135,000,000’만원으로 IQR1.5항목 치환

## 부록2. 아동수당 선정기준 도출방식에 따른 수급대상 분포 예측 비교분석 결과 (공제 미적용 시)

□ Cut-off ☞ 총소득 & 순자산 90% 선정기준 적용 시 전체 아동  
가구 및 아동수 대비 수급예상 비율 산출  
(RTadj: SRQT(가구원수) 균등화 지수 적용 방식,  
PLadj: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균등화지수  
적용 방식)

○ 총소득(원) ☞ 90% 선정기준

구분	GI_predict	GI_predict_RTadj	GI_predict_PLadj
전체 가구	7,478,768	4,455,638	3,677,410
2인 이상	8,832,656	4,797,695	3,694,248

○ 순자산(만원) ☞ 90% 선정기준

구분	Netasset_predict	Netasset_predict_RTadj	Netasset_predict_PLadj
전체 가구	49,816	30,620	25,280
2인 이상	60,349	34,073	26,555

□ 소득인정액 방식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연 12.48%, 연  
16.68%) 및 가구균등화 지수(RT, PL) 적용에 따  
라 전체 가구 및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추정한  
90분위 선정기준 적용 시 전체 아동가구 및 아동수  
대비 수급예상 가구 및 아동수 비율 산출

○ 소득인정액(만원) ☞ 90% 선정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구분	acincome0_4	acincome0_4_RTadj	acincome0_4_PLadj
전체 가구	893	528	434
2인 이상	1,054	574	443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12.48% 적용

구분	acincome0_12	acincome0_12_RTadj	acincome0_12_PLadj
전체 가구	1,220	721	591
2인 이상	1,444	791	612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16.68% 적용

구분	acincome0_16	acincome0_16_RTadj	acincome0_16_PLadj
전체 가구	1,386	820	672
2인 이상	1,643	903	699

□ 가구단위 분석자료 기준 소득인정액\_공제미적용\_2인이상가구  
선정기준\_모의적용\_분석결과 (예상 수급가구 비율)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가구 균등화 지수 미적용 시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가 구	비수급	1,475,952	6.9	6.9	6.9
	수급	19,768,555	93.1	93.1	100.0
	전체	21,244,507	100.0	100.0	

－ 가구 균등화 지수(RT) 적용 시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가 구	비수급	1,753,751	8.3	8.3	8.3
	수급	19,490,756	91.7	91.7	100.0
	전체	21,244,507	100.0	100.0	

－ 가구 균등화 지수(PL) 적용 시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가 구	비수급	2,028,586	9.5	9.5	9.5
	수급	19,215,921	90.5	90.5	100.0
	전체	21,244,507	100.0	100.0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12.48%

－ 가구 균등화 지수 미적용 시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가 구	비수급	1,492,368	7.0	7.0	7.0
	수급	19,752,139	93.0	93.0	100.0
	전체	21,244,507	100.0	100.0	

## - 가구 균등화 지수(RT) 적용 시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가 구	비수급	1,739,382	8.2	8.2	8.2
	수급	19,505,125	91.8	91.8	100.0
	전체	21,244,507	100.0	100.0	

## - 가구 균등화 지수(PL) 적용 시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가 구	비수급	1,970,807	9.3	9.3	9.3
	수급	19,273,700	90.7	90.7	100.0
	전체	21,244,507	100.0	100.0	

##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16.68%

## - 가구 균등화 지수 미적용 시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가 구	비수급	1,499,700	7.1	7.1	7.1
	수급	19,744,807	92.9	92.9	100.0
	전체	21,244,507	100.0	100.0	

## - 가구 균등화 지수(RT) 적용 시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가 구	비수급	1,739,707	8.2	8.2	8.2
	수급	19,504,800	91.8	91.8	100.0
	전체	21,244,507	100.0	100.0	

## - 가구 균등화 지수(PL) 적용 시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가 구	비수급	1,960,357	9.2	9.2	9.2
	수급	19,284,150	90.8	90.8	100.0
	전체	21,244,507	100.0	100.0	

□ 가구단위 분석자료 기준 소득인정액\_공제미적용\_2인이상가구  
선정기준\_모의적용\_분석결과  
(수급예상 아동수 및 가구원수 규모 및 비율)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가구 균등화 지수 미적용 시

Elig_2Over_Acincom0_4		수급대상아동수	가구원수
비수급	N	168,783	168,783
	전체 N의 퍼센트	8.4%	8.4%
	합계	212,630	702,555
	전체 합계의 퍼센트	8.3%	9.2%
수급	N	1,828,797	1,828,797
	전체 N의 퍼센트	91.6%	91.6%
	합계	2,338,022	6,928,646
	전체 합계의 퍼센트	91.7%	90.8%
전체	N	1,997,580	1,997,580
	전체 N의 퍼센트	100.0%	100.0%
	합계	2,550,652	7,631,201
	전체 합계의 퍼센트	100.0%	100.0%

－ 가구 균등화 지수(RT) 적용 시

Elig_2Over_Acincom0_4		수급대상아동수	가구원수
비수급	N	142,943	142,943
	전체 N의 퍼센트	7.2%	7.2%
	합계	173,342	548,601
	전체 합계의 퍼센트	6.8%	7.2%
수급	N	1,854,637	1,854,637
	전체 N의 퍼센트	92.8%	92.8%
	합계	2,377,310	7,082,600
	전체 합계의 퍼센트	93.2%	92.8%
전체	N	1,997,580	1,997,580
	전체 N의 퍼센트	100.0%	100.0%
	합계	2,550,652	7,631,201
	전체 합계의 퍼센트	100.0%	100.0%

## - 가구 균등화 지수(PL) 적용 시

Elig_2Over_Acincom0_4		수급대상아동수	가구원수
비수급	N	134,325	134,325
	전체 N의 퍼센트	6.7%	6.7%
	합계	160,031	497,251
	전체 합계의 퍼센트	6.3%	6.5%
수급	N	1,863,255	1,863,255
	전체 N의 퍼센트	93.3%	93.3%
	합계	2,390,621	7,133,950
	전체 합계의 퍼센트	93.7%	93.5%
전체	N	1,997,580	1,997,580
	전체 N의 퍼센트	100.0%	100.0%
	합계	2,550,652	7,631,201
	전체 합계의 퍼센트	100.0%	100.0%

##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12.48%

## - 가구 균등화 지수 미적용 시

Elig_2Over_Acincom0_12		수급대상아동수	가구원수
비수급	N	148,451	148,451
	전체 N의 퍼센트	7.4%	7.4%
	합계	187,696	629,406
	전체 합계의 퍼센트	7.4%	8.2%
수급	N	1,849,129	1,849,129
	전체 N의 퍼센트	92.6%	92.6%
	합계	2,362,956	7,001,795
	전체 합계의 퍼센트	92.6%	91.8%
전체	N	1,997,580	1,997,580
	전체 N의 퍼센트	100.0%	100.0%
	합계	2,550,652	7,631,201
	전체 합계의 퍼센트	100.0%	100.0%

## - 가구 균등화 지수(RT) 적용 시

Elig_2Over_Acincom0_12		수급대상아동수	가구원수
비수급	N	122,723	122,723
	전체 N의 퍼센트	6.1%	6.1%
	합계	149,791	481,364
	전체 합계의 퍼센트	5.9%	6.3%
수급	N	1,874,857	1,874,857
	전체 N의 퍼센트	93.9%	93.9%
	합계	2,400,861	7,149,837
	전체 합계의 퍼센트	94.1%	93.7%
전체	N	1,997,580	1,997,580
	전체 N의 퍼센트	100.0%	100.0%
	합계	2,550,652	7,631,201
	전체 합계의 퍼센트	100.0%	100.0%

## - 가구 균등화 지수(PL) 적용 시

Elig_2Over_Acincom0_12		수급대상아동수	가구원수
비수급	N	113,971	113,971
	전체 N의 퍼센트	5.7%	5.7%
	합계	136,893	431,512
	전체 합계의 퍼센트	5.4%	5.7%
수급	N	1,883,609	1,883,609
	전체 N의 퍼센트	94.3%	94.3%
	합계	2,413,759	7,199,689
	전체 합계의 퍼센트	94.6%	94.3%
전체	N	1,997,580	1,997,580
	전체 N의 퍼센트	100.0%	100.0%
	합계	2,550,652	7,631,201
	전체 합계의 퍼센트	100.0%	100.0%

##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16.68%

## - 가구 균등화 지수 미적용 시

Elig_2Over_Acincom0_16		수급대상아동수	가구원수
비수급	N	142,387	142,387
	전체 N의 퍼센트	7.1%	7.1%
	합계	180,330	607,172
	전체 합계의 퍼센트	7.1%	8.0%
수급	N	1,855,193	1,855,193
	전체 N의 퍼센트	92.9%	92.9%
	합계	2,370,322	7,024,029
	전체 합계의 퍼센트	92.9%	92.0%
전체	N	1,997,580	1,997,580
	전체 N의 퍼센트	100.0%	100.0%
	합계	2,550,652	7,631,201
	전체 합계의 퍼센트	100.0%	100.0%

## - 가구 균등화 지수(RT) 적용 시

Elig_2Over_Acincom0_16		수급대상아동수	가구원수
비수급	N	116,690	116,690
	전체 N의 퍼센트	5.8%	5.8%
	합계	142,779	461,041
	전체 합계의 퍼센트	5.6%	6.0%
수급	N	1,880,890	1,880,890
	전체 N의 퍼센트	94.2%	94.2%
	합계	2,407,873	7,170,160
	전체 합계의 퍼센트	94.4%	94.0%
전체	N	1,997,580	1,997,580
	전체 N의 퍼센트	100.0%	100.0%
	합계	2,550,652	7,631,201
	전체 합계의 퍼센트	100.0%	100.0%

## - 가구 균등화 지수(PL) 적용 시

Elig_2Over_Acincom0_16		수급대상아동수	가구원수
비수급	N	108,265	108,265
	전체 N의 퍼센트	5.4%	5.4%
	합계	130,399	413,110
	전체 합계의 퍼센트	5.1%	5.4%
수급	N	1,889,315	1,889,315
	전체 N의 퍼센트	94.6%	94.6%
	합계	2,420,253	7,218,091
	전체 합계의 퍼센트	94.9%	94.6%
전체	N	1,997,580	1,997,580
	전체 N의 퍼센트	100.0%	100.0%
	합계	2,550,652	7,631,201
	전체 합계의 퍼센트	100.0%	100.0%